

저출산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평

이재경 |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지난 해 가임여성 1명이 낳은 평균 자녀수는 1.08명,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낮은 출산율은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가속화시키게 되며 미래 한 국사회는 침체와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를 증폭시켜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8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¹⁾ 플랜 2010』(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까지 OECD 국가 평균수준인 합계 출산율 1.6명을 목표로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1983년 합계출산율(2.08명)이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로 떨어진 이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왔지만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5명 이하로 하락하면서부터이다. 특히 2002년 가임여성 평균 출산 자녀수가 1.17명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면서는 출산율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거의 공포에 다다랐다. 이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은 가구당 1-2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으며, 자녀수와 국가의 경제성장은 부적(negative) 관계에 있다고 믿었다. 1960년대 이후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가

족계획사업의 주요 메시지는 “자녀를 적게 낳아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인구억제 정책이었다. 그러나 낮은 출산율이 인구 고령화와 결합되면서 노동인구 및 부양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경제 침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즉 21세기에는 자녀수와 경제성장이 정적(positive)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논리이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서둘러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인구학자들은 혼인상태, 혼인연령, 피임 등 출산조절기술 사용을 출산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으로 보고, 여성지위, 가족규범, 육아 인프라, 국가경제 등 사회경제적 변수를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요인으로 설명한다. 최근의 출산율 하락은 이러한 요인들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결과이다. 출산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은 출산행위를 결정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모색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현상적인 문제에 대한 단기적 처방만 보일 뿐 왜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장

1) 새로마지는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를 의미한다.

기적 방향 설정이 미흡하다.

출산을 하락은 사회변동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21세기 후기근대사회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오면서 인간의 삶이 많이 바뀌었듯이 후기근대사회에서 우리들의 삶은 패러다임적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예컨대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자녀가 노동력으로 인식되고 따라서 다산이 존중되었다. 60년대 가족계획사업 초기에는 ‘제 먹을 것은 제가 타고 난다’고 믿는 농촌 사람들에게 ‘자녀출산과 양육에 비용이 든다’는 점을 설득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21세기 초반 우리 사회는 이미 소자녀가 규범으로 자리 잡았고²⁾ 개인주의의 확대, 소비사회적 특성, 여성취업 증가로 나타난 성별분업(gender division of labor)³⁾의 변화, 만혼현상과 동거, 이혼의 증가 등에서 보이는 근대 핵가족규범의 약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출산행위 및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대책들의 핵심은 취업여성의 육아문제 해결, 출산을 유도하는 경제적 지원, 결혼과 자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가족문화의 조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이미 변화되어 가는 젠더관계와 결혼 및 가족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과거 가족계획사업에서는 ‘출산’이 인구문제로 간주되어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깊이 개입할 수 있었지만, 점차로 사회가 개인화되어가고 있는 후기근대사회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출산행위를 변화시키기 쉽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산과 자녀양육, 결혼과 가족, 친밀성(intimacy)과 사적 생활(private life)에 대한 개인의 욕구와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새로운 해석과 설명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논의되는 저출산의 원인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여성지위 또는 젠더관계가 출산율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논의한다. 그리고 성별분업의 약화 및 성평등(gender equality)이 출산율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후 정책에 대한 장기적 전략을 제안한다.

1. 출산율 하락에 대한 원인 진단과 ‘기본계획’

‘기본계획’에서는 우리사회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 고용 및 소득 불안 등 경제적 요인, 육아 인프라의 부족 등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요인, 결혼관 약화와 자녀관 변화로 나타나는 가치관의 변화를 들고 있다. 지난 2~3년간 전문가들도 이와 유사한 진단을 해 왔으며,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출산율 하락을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인구학적 변수는 결혼연령 상승과 출산 연기 또는 포기다. 출산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김승권, 2003; 장혜경, 2004)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의 배경에는 ‘평등’에 대한 욕구로 나타나는 여성의식의 변화, 여성경제활동참여 정도, 사교육비 부담, 청년층의 고용불안, 육아 인프라의 부족, 전통적 자녀관의 변화, 결혼은 ‘선택’이라고 여기는 젊은 여성들의 결혼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출산율 하락의 직접적 원인은 결혼 및 출산의 지연이다. 결혼 및 출산 지연의 배경에는 청

2)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중매체에서는 다자녀 가족의 행복한 가족생활을 소개하곤 한다. 그러나 8-9명의 자녀와 이들의 가족생활을 보면서 소자녀 가족에 비해 더 행복해 보인다면, 우리 부부도 자녀를 많이 낳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3)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다른 종류의 일을 한다는 의미인데, 여성은 주로 가정에서 가사일과 돌봄 노동을 하고 남성들은 주로 공적(public) 영역에서 노동을 한다. 또한 공적 영역에서도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노동의 종류(직종)와 남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노동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포함한다. 흔히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여성이 수행하는 일이 남성의 일보다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년층의 고용불안, 여성취업 및 의식의 변화, 소자녀 선호 규범이 있다. 소자녀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가족 계획사업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있으며,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비의 부담이 빈번하게 거론된다. '기본계획'에서는 국민들이 평균 2명 이상의 자녀를 원한다는 전제 하에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양육의 장애요인 제거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양육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 출산자녀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문제인식은 개인의 삶과 자녀의 의미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행위는 그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대를 잇는 아들을 낳는 것이 출산의 목적이었다. 다수의 딸을 낳아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출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근대화 이후 가족계획사업 시기에는 여성의 출산행위는 국가에 의해서 조절되곤 하였다. 국가는 이상 자녀수⁴⁾를 제시하면서 가족을 위해, 국가 경제를 위해 출산을 조절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때에는 국가의 출산억제정책이 개인의 사생활에 지나친 개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과 가족의 이해와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의 이해가 공유되어 출산억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출산율을 상승시키려는 국가의 이해는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젊은 남녀의 이해와 일치하는 것 같지 않다. 예컨대 '기본

계획'에서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희망자녀수가 2명 이므로 양육여건이 좋아지고 '자녀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면 2명 이상 낳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자녀의 소중함, 부모 됨의 기쁨이나 경험은 자녀가 하나 있으면 어느 정도 충족되고 그 이후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사항'이 된다 (Presser 2001).

한편 '기본계획'에서는 고용불안, 청년실업, 사교육비 부담 등이 출산을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경제적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원인진단은 옳다. 그러나 고용이 안정되면 결혼 연령을 앞당길 수 있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면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가? 비정규직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정규직 취업이 되면 둘째 아이를 낳는 부부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사교육비의 부담이 크지 않으면 셋째 아이를 낳는 부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 중에 간과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자본주의 경제에서 확대되고 있는 '소비'의 문제이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소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과거에는 구매하지 않았던 다양한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소비한다. 소비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전 보다 많은 소득이 필요하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교육비의 경감이 출산율 상승에 미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에까지 보육·양육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보육시설 설립을 위한 장기적 투자 계획과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기 근대사회에서 소비와 삶의 질은 깊이 연관되

4) 1960년대부터 국가는 가족계획 표어에서 이상 자녀수를 제시하고 있다.

'뉘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합계출산율이 5명 이상이었던 1960년대) / '3·3·35운동: 자녀 셋을 삼년 터울로 서른다섯 살 이전에 단산하자' (60년대 중반)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70년대, 합계출산율 3~4명) /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80년대, 합계출산율 2~3명, 강한 남아선호)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2004년, 저출산시기)

어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최근에 삶의 질을 중시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웰빙’ 열풍도 소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개인이 결혼을 미루고 자녀 출산을 꺼리는 것은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질 높은 삶을 꾸리기 위해 소비할 수 있는 돈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부모라고 예외는 아니며, 극심한 경쟁 속에서 과도한 노동(overwork)에 시달리는 성인들은 쉬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자녀양육은 부모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노동을 요구한다. 과거에는 자녀와 가족이 성인 남녀의 삶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내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를 단순히 결혼 또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나 개인의 이기심으로만 볼 수 없으며, 우리들 삶의 의미와 방식이 바뀌어 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본계획’의 또 다른 한계는 정책대상이 ‘정상가족’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혼인율이 감소하고 남녀의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따라서 출산자녀수도 감소하고 있다.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학교교육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젊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결혼해서 가족을 꾸리는 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기 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맞추어 결혼이나 자녀 출산을 계획한다. 출산율 안정에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프랑스를 보면 신생아의 절반이 독신여성이나 동거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다. 흔히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급진적이라거나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다고 비난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 충족되어 오던 친밀성의 욕구는 후기근대사회에서 구조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라도 급변하는 젊은 세대의 삶의 방식

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2. 출산율과 젠더관계

최근 저출산을 둘러싼 담론은 여성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women's issue)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출산을 인구문제(demographic issue)로 접근했지만, 이제는 여성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자녀 출산을 여성이 혼자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저출산의 문제도 ‘여성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출산율 하락에 대한 설명에는 여성과 젠더관계가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은 분명하다(Mason, 2001). 흔히 여성지위 상승이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이러한 주장은 최근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경험에서 반박되고 있다. 다음은 여성지위와 출산율에 대한 통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성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도전만이 출산율을 안정시킬 수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여성지위와 출산율에 대한 일반적 통념

과거 인구학 연구들에서는 여성지위가 향상될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취업이 증가하고, 가부장적 가족규범이 약화되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별분업과 결혼중심의 가족문화를 전제로 하는 근대 가족규범의 안정성이 약해지면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도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의 하나는 ‘정상가족’ 규범을 토대로 가족의 안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혼인율 하락, 이혼율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는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통념 1: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하락한다.

여성들의 교육수준향상으로 경제활동의 참여가 늘고, 자아실현과 평등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여 출산을 기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OECD 국가의 경우를 보았을 때, 과거에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 출산력 저하로 나타나던 것과는 달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출산율 상승과 비례하고 있다(Sleeboos 2003). 즉,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 통념 2: 여성 고용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은 하락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 혼인연령과 출산연령이 상승하기 때문에 소자녀를 선호하게 되고, 자녀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OECD 국가의 여성고용율과 함께 출산율의 관계는 이러한 가정과는 반대로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국가가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980년에는 여성 고용율이 높은 국가가 출산율이 낮은 경향이었으나, 1999년에는 반대로 나타났다(Sleeboos 2003).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처음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출산율은 감소하나, 경제활동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안정을 이룬 상태에서는 출산율이 안정된다. 이는 여성 고용 증가에 따른 젠더관계의 재편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OECD 국가들의 경우 여성의 고용과 출산율 안정이라는 목표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이재경 외, 2005b).

- 통념 3: 혼인이 감소하고 이혼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은 하락한다.

저출산 담론에서 흔히 지적되는 것은 혼인율의 하락, 이혼율의 증가이다. 그러나 혼인 감소와 이혼 증가가 반드시 출산력 저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혼인연령 상승과 이혼의 증가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혼인을 중심으로 하는 '정상가족' 규범이 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는 혼인의 감소가 동거커플의 증가로 나타나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혼인감소가 독신가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일찍 결혼하면 출산율이 높아지는가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어렵다. 2002년 통계를 보면 프랑스(남: 30.4세, 여: 28.2세)나 스웨덴(남: 32.5세, 여: 30.1세)은 한국(남: 29.8세, 여: 27.0세) 보다 결혼 연령도 높고 출산율도 높다.

마찬가지로 혼인율이 낮고 이혼율이 높은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출산안정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결혼 및 가족규범을 강하게 유지하는 남부유럽 국가(이탈리아나 스페인)들은 매우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남부유럽국가와 스웨덴을 비롯한 서부유럽 국가가 보여주고 있는 동거율의 차이, 혼외 출산율의 차이는 이들 국가의 출산율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이재경 외, 200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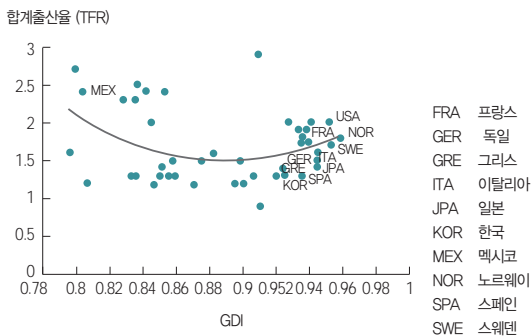
2) 여성주의적 설명: 가부장적 질서가 약하고 성평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안정된다.

- 설명 1: 성평등이 출산율을 안정시킨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출산율 하락에 대한 통념이 모든 사회나 국가에 일반화할 수 없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 혼인감소 및 이혼증가와 같은 파트너십(partnership)의 변화에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가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쉐네(Chesnais 1996)는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에서는 반대로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쉐네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산율과 성평등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2005년도 UNDP 인간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의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남녀평등지수)⁵⁾ 값과 합계출산율을 도표로 표시한 결과 출산율과 성평등의 관계는 U자형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합계출산율과 남녀평등지수(GDI)의 관계



자료 : UNDP (2005).

물론 남녀평등지수(GDI)가 한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남녀평등지수는 '기회 평등'을 보여주는 제한된 지표만을 사용하여, 한 사회의 성불평등의 구조적 맥락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즉 남녀가 처한 '조건'의 평등 또는 '결과'의 평등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도표는 개략적인 경향

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설명 2: 2인 소득가구⁶⁾의 증가와 불안정한 성별분업이 출산율을 하락시킨다.

최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면서 2인 소득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남성 생계부양자 / 여성 가사담당자라는 근대의 핵가족 규범은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여성들의 공적 영역 참여와 지위 향상은 성별분업체제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따라 2인 소득 가구라는 외형적 형태는 변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족 내 성별분업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불안정한 성별분업은 부부간의 갈등을 촉발하기도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여성과 느리게 변화하는 (또는 변화하지 않는) 남성간의 갈등은 여성이 혼인을 기피하거나 출산을 연기하는 요인의 하나이다. 이미 여성의 취업으로 전통적 성역할은 변화되고 있지만 가부장적 특권을 유지하려는 남성들은 이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 고용이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성역할 분담이 남성들의 결혼 및 자녀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요즈음 젊은 남성들은 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일찍 결혼하여 평생을 가장으로 가족부양의 부담을 지고 싶어 하지 않으며, 때로는 결혼과 자녀 출산을 회피하거나 시기를 늦추려고 한다. 지금까지 당연시해 왔던 성별분업은 남녀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다.

5) 남녀평등지수는 기대수명, 문자 해독률, 교육수준의 남녀 차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지표이다.

6) 남성이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는 성별분업과 달리 남성과 여성이 모두 직업을 가지고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를 말한다. 흔히 맞벌이 가족으로 불린다.

• 설명 3: 남성들이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날 때
출산율은 높아진다.

흔히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전담자의 성별 분업이 체계화된 전형적인 가족형태가 출산과 육아에 가장 안정적이라고 가정된다. 그러나 서구의 연구를 보면 가족 내 가사분담과 육아분담의 형평성이 출산에 친화적이다. 토오와 셔트(Torr and Short 2004)는 미국 내 맞벌이 가구에 대한 조사에서 가구 내 가사분담이 비교적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가구가 둘째아이 출산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맥도널드(McDonald 2000)는 저출산은 공적 영역에서 개인적 제도(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수준의 평등과 가구/가족제도(family-oriented institution)의 불평등성 간의 갈등 또는 불일치의 결과임을 확인한다. 2003년 기혼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48.0%인데 반해,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여성이 주로 부담' 하는 비율이 88.9%,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8.1%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직장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

• 설명 4: 남성 표준 노동자 모델⁷⁾로 인한 돌봄⁸⁾
(care)의 공백이 출산율을 하락시킨다.

여성들이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노동시장 자체가 성별분업을 정상화하는 가족 규범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의 변화에 비해 노동시장의 재조직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노동시장의 표준 노동자 모델은 돌봄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는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 모델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은 돌봄노동을

수행하면서 노동자 모델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돌봄의 역할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전략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여성들은 자녀출산이나 양육을 이유로 직장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남편을 포함한 가족구성원들도 소득감소를 이유로 아내의 퇴직을 권하지도 않는다. 또한 지금까지 여성이 해왔던 돌봄의 역할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돌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매력적인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과 고용위축을 이유로 일·가족 지원제도 도입에 반발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질 높은 노동력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 설명5: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가족 지원
정책은 출산율을 안정시키기 어렵다.

최근 출산율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여성의 이중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일-가족의 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도 '여성의 자아실현과 결혼 출산 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활성화, 보육시설 확충, 탄력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기본계획'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여성의 이중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일-가족 지원 정책은 전통적 성별분업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부과하고, 가족 내 성별분업을 유지한 채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는 정책은 '성평등'을 지향한다고 볼 수 없다.

7) 노동시장이 가정하고 있는 보편적 노동자의 모델이 남성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표준 근로시간(예컨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과 고용조건은 노동자가 육아와 가사와 같은 재생산에 필요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며, 가정에는 육아와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사람(여성)이 따로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8) 인간의 생애주기는 유아기, 성장기, 노년기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기간을 포함한다. 대부분 이들을 돌보는 일은 가족 내에서 여성이 담당한다. 여성학자들은 돌봄 행위의 중요성을 가시화하고 이러한 행위가 노동임을 강조하기 위해 돌봄노동(care wor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기본계획’에서는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의 취업을 ‘자아실현’으로 표현하고, 남성에게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성역할에 대한 경직된 사고를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안정된 유럽 국가들의 정책 방향은 가족과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2인 소득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적 성별분업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이재경 외, 2005b).

3. 출산율 안정을 위한 전략적 사고

출산율의 안정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부장적 질서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는 이루어내기 어렵다. 아이를 낳고 기르려 하는 성인남녀, 양질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 국가의 번영을 꾀하는 정부 모두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출산행위나 가족의 변화를 이끄는 젠더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저출산 현상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개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출산율 안정을 위해 어떠한 제도적 지원들이 필요한가? 그러한 정책들의 장기적 방향과 실질적인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글에서는 지금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이 성평등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practical needs)만을 중시하고 전략적 요구(strategical needs)를 간과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다. 실질적 요구는 현재 상태에서 삶의 조건과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 요구는 여성의 삶의 조건을 다소 개선시킬 수는 있으나 불평등한 젠더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전략적 요구는 현재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평등한 젠더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말한다(이재경 외, 2005a: 158).

첫째, 출산정책의 우선적 목표는 성평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산율 안정을 위해 출산장려나 친가족(pro-family)정책을 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보다는 공사업역에서의 성차별 및 성별분업 해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 각국의 저출산 정책을 비교해 보면 성평등 실현을 우선적 정책 목표로 택하고, 이를 지원하는 구체적 정책들을 시행한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도 증가하고 출산율도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에서 지향하는 가족 모델은 2인 소득 가구가 되어야 한다. 여성의 노동참여를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과 가족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에서는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일하고 가족 내 의무나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2인 소득 가구를 지향해야 하며, 일-가족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과 사로 분리되었던 성별분업구조를 완화시켜주며, 출산율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남성중심적 노동규범 및 관행의 변화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성 표준 노동자 모델의 변화가 요구된다. 돌봄의 책임을 지는 여성과 남성의 삶을 중심으로 표준 노동자 모델이 변화해야 한다. 남성중심의 노동자 모델은 계속해서 여성을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노동자 위치에 머물게 하고, 가족 내 돌봄의 책임이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이 된다면 아무도 돌봄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 저출산 정책은 특히 여성의 평등한 고용참여와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함께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혼인을 포함한 파트너십의 평등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문화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혼인율의 감소가 반드시 저출산을 야

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 법률혼에 대한 문화적 규범의 부과 정도에 따라 출산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미 낮은 출산율을 경험한 서구 국가들을 보면 성역할구조를 완화시키지 않는 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혼인관계에만 허용하는 결혼중심주의를 해체하지 않는 한, 출산율 안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통적 성역할의 구분이 약화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결혼 외 관계에서 자녀 출산이 문화적·제도적으로 허용될 때 출산율 상승의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성인들간의 파트너십 형태가 아동들의 복지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이 시점에서 5년 후, 10년 후에 합계출산율이 몇 명이 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낙관적으로 말하면 많지 않거나, 비관적으로 말하면 거의 없을 것이다. 20여 년 동안 빠른 속도로 합계출산율을 떨어지게 한 가족계획사업처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단순히 합계출산율을 상승시킬 수는 없다는 점에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한다. 따라서 단기간의 정책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방향설정이 출산율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그 속도에 준하는 급진적인 사고나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2006-2010』.

김승권. 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은기수. 2002. “출산율 추이와 그 변화의 원인.” 『출산율 1.30 진단과 대안』.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포럼 자료집(200년 10월 28일).

이수희. 2005. 『‘저출산’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저출산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이재경 외. 2005a. 『저출산의 젠더 분석 및 정책 대안 연구』.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_____. 2005b. “유럽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한국여성학』 제21권 3호.

장혜경. 2004.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Chesnais, Jean-Claude. 1996.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 729-39.

Mason, Karen O. 2001. “Gender and Family Systems in the Fertility Transition.” R.A. Bulatao and J.B. Casterline(eds.) *Global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Council.

McDonald, Peter.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39.

Presser, Harriet B. 2001. “Comment: A Gender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Low Fertility in Post-Transitional societies.” R.A. Bulatao and J.B. Casterline(eds.) *Global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Council.

Sleebos, Joelle E.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Torr, Berna Miller & Short, Susan E. 2004. “Second Birth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109-30.

UNDP. 2005. *Human Development Report*. UNDP.